

저성장 기조 수출·내수·투자 '뒷걸음'

김영용 교수가 본 올해의 경제

병술년(丙戌年)이 저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행운이 함께한 해로 기억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것. 지난날을 거울삼아 좀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면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불안정한 지식을 가진 인간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까운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조심스럽게 새해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우리 경제에는 내외적으로 많은 충격과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유가 상승으로 시장 여건이 위축됐고, 가계소비 침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경제가 주춤한 한 해였다.

국민총소득 담보...실속없는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분기까지의 성장률이 5.4%를 기록하여 4분기에 4.01%만 성장해도 5% 달성은 무난하리라는 예상이다. 물론 교역조건의 악화로 구매력을 감안한 국민총소득(GNI)은 담보 상태를 보였다. 실속 없는 성장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다. 특히 똑같은 국제경제 환경 하에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홍콩보다 밀도는 성장률을 보인 것은 현재 우리 경제에 내재돼 있는 고장난 시스템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성장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수출이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수출은 3천억 달러를 넘어 14% 정도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7%를 넘게 증가했다. 다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는 4.2%의 증가세를 보여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금년도 경제전망도 그다지 밝지않은 않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물론 민간연구소에서 내놓은 예상 성장률은 작년 5.0%를 밀도는 3.8~4.5% 정도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엇비슷할 전망이다.

하반기 성장세로 돌아설 수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은 작년보다 낮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수입은 작년의 18%에서 9% 내외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경상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에서 30억 달러 적자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6% 내외로 낮게 전망되고 있다.

고질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계 소비는 작년보다 더 낮은 4% 정도로 전반적인 국내총생산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재산세 증가와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 침체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다들스런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두드러져 침체

국면을 빠져나오리라는 예상이다.

금년 우리 경제는 몇 가지 복병을 안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 문제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다. 당장은 악재로서의 영향이 끝난 듯하지만, 베이징 6자 회담의 진행 결과에 따라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불씨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

주택 담보대출 부실화 '태풍'

둘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한 금융경색 현상이 단기간에 발생한다면 주택을 비롯한 자산 디플레이션(asset deflation)으로 소비 침체와 금융권의 주택 담보 대출의 부실화가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후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과 함께 금리 인상 압력이 현실화되어 그 효과를 발휘할 경우, 사후적인 주택 거품 붕괴로 소비 침체는 더욱 가속될 것이며, 몇몇 취약한 금융기관 부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 하더라도 연착륙하도록 시간을 두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압박관념에 사로잡힌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경제 전체를 먹구름에 휩싸이게 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이끌어 침체된 소비



올해는 대선, 북한 핵 문제 등 각종 변수가 산재해 있어 시장경제 회생 여부를 둘러싼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해년(丁亥年) 새해 삼성광주전자 직원 이 세탁기 생산라인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북핵·부동산 폭탄·금산법·대선...대형 돌출변수 준비 분배 우선 반시장 경제운용 기조 저성장 가장 큰 원인 정부 개입 줄여 기업에 자율, 시장에 활기 불어 넣어야

를 늘리기 위한 관건은 기업 투자 활성화인데, 이는 금년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작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그 폐지가 논의되었던 출자총액 제한의 사실상 유지 등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금산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가 5%를 상회하여 보유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결권의 일부 제한 및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한 것이어서 삼성 등 해당 기업집단의 경영권 유지와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금년도 설비투자 증가율 예상치 6%도 금산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것이어서 금산법 통과로 더 낮은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민간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비로 청년 실업 문제는 금년도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청년실업 해결 기미 없어

작년에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시아의 경쟁국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더딘 것은 현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동전의

앞면인 성장과 분배를 때 내어 분배 우선 정책을 고집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도 어긋난 부동산 정책, 무거운 세금 등의 반시장적 정책 기조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게다가 한미동맹의 균열과 온정적 대북정책으로 인한 국방비 부담 증가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으로 표현되는 선거 전후의 경기부양과 침체가 몰고 올 악영향이 또 다른 변수이다. 작년의 5% 성장이나 금년의 4% 중반대 성장이 예상되는 것은, 시장의 작동을 억압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민간의 활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상승 국면은 짧아진 반면 하강 기간은 길어져 자칫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씻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일이다. 이는 곧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다.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고 어두운 측면을 대부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민간 경제에 깊게 개입할수록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는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예외없이 밝혀진 사실임을 유념해야 한다.

■ 김영용

▲해남 출생(55) ▲서울대 공대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하이테크회장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2007년 1월 2일 화요일

세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신형 3D 입체 영상 기술로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3D 입체 영상과 3D 입체 영상

주식회사 GA 엔터테인먼트 건축사무소
인직원 입동

주식회사 토형이앤시
대표이사 김원봉
TEL: 092-25383-8118 092-2538-7777